체포 아닌 자진출석 주장… 조사·진술 거부로 '버티기' 전망

尹, 공수처 수사 불법 강조
대국민메시지 등 여론전 사활
탄핵 기각시 내란수사 무위 판단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권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면서도 '체포'가 아닌 '출석'이라고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 대국민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입장을 전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본격화되자 여론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청사 도착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전 영상 등으로 배포한 대국민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에 진입했을 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진출석으로 갈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메시지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고 한 발언이 눈에 띈다. 자진출석을 주장하던 윤 대통령은 본인의 상태를 '체포'가 아니라 '출석'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금일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선을 그었다.

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역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사태(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입을 열 경우, 계엄은 위법·위헌적이지 않고 내란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머무르고 있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4용지 14장 분량의 긴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만년필로 작성한 육필 원고였다.

윤 대통령은 이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부정선거'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주장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내용이 재차 언급되기도 했다. 부정선거 역시 지난번 대국민담화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국민메시지와 육필 원고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 "국민 여러분이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강조해,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서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이에 향후 구속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여론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복귀 구상'은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무산, 탄핵심판 기각, 수사 무력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 체포가 무산되면 여론이 탄핵 기각에 쏠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론의 향방을 살피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전망한 셈이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내란 수사'는 자연스레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 일부 참모와 친윤(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논리를 들어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돼 '내란 수괴' 혐의로 대면조사를 받게되면서, 오히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관저 넘어선 공수처·경찰… 1000여명 2차 영장 집행

비상계엄 선포 43일만에 체포
국회, 헌재 등 국정 정상화 주력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만에 체포됐다. 계엄 선포부터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국회,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국정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과정이 펼쳐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운운하는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108석. 여당 내 이탈표 8표만 나오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재표결 문턱까지 넘을 수 있었다.

그러던 12월 3일 오후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에 따른 계엄령 이후 46년만에 선포된 계엄령이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고등학교 동문 '충암파'가 주축이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계엄 선포시에도 입법부의 기능을 침탈할 수 없음에도 국회엔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등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계엄 선포 소식과 계엄군 국회 투입 소식을 들인 시민과 국회 직원, 보좌진들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았고 계엄군의 투입을 일시 지연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급속히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집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불러모았다. 결국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가 넘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탄핵안 1·2차 표결과 尹 칩거 돌입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또 다시 '탄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주말에 표결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으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주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를 열고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남동 칩거가 시작됐다.

◆헌재 8인 체제 구성, 윤석열 체포

대통령 직무는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인 체제였는데, 6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은 재판관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고, 6인 체제에선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었다.

야당의 거센 요구에도 한 전 총리는 여야에 합의를 요청하며 3인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한 전 총리가 야당의 발의한 농업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국회는 야당 주도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 뒤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았다. 최 권한대행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 추천 후보자 1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8인 구성으로 만들었다.

남은 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는 등 체포 영장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돌아갔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1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오전 10시33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관저에서 나와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지 43일만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윤 대통령 체포까지 주요일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엄 해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7일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11일	검찰 특수본, 15일 1차 출석 통보(불응)
12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발의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16일	공조본, 18일 1차 출석 통보(불응) 검찰 특수본, 21일 2차 출석 통보(불응)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검찰, 공수처로 윤 대통령 수사 이첩
20일	헌재,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공조본, 25일 2차 출석 통보(불응)
24일	윤 대통령, 헌재에 국무회의 회의록 및 포고령 제출 명령 불응
26일	공조본, 29일 3차 출석 통보(불응)
27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재 변론준비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
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31일	서부지법, 영장 청구 33시간여 만에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5시간 30분만에 철수
6일	공수처, 체포영장 재청구
7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5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에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내란국조특위, 기관보고 실시… 한덕수·조태용 출석

韓 총리 "김용현, 계엄 선포 건의 없어"

내란국조특위가 15일엔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불러모아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주요 증인들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상을 따져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 건의를 한 적 없냐고 따져물었다. 한 총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보도자료도 내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당초 했던 이야기를 번복했다"고 부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다. 주요 내용은 법이 모두 무너지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불법 무효인 영장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4년 전 설립 이후 제대로 한 수사와 기소가 없어서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권한 없는 사건에 뛰어들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